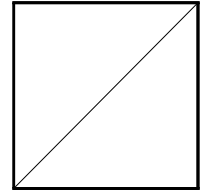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8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2. 21. (제 3 차)	

연체이력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2. 21.

## 1. 보고주문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소액연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소액 연체의 경우 채무자가 연체금액을 '24.5.31.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력정보를 금융권에서 공유·활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상 제재를 면책하고자 함

## 3. 보고내용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연체에 대하여 채무자가 '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채무자가 직접 상환한 경우와 보증인의 대위변제 등으로 상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근거로 제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4. 참고사항

가.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금융감독원, <별지1> 참조)

나. 관련 법규 : <별지2> 참조

## 연체이력 정보 공유제한 관련 비조치의견서(안)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디지털혁신국	담당자	선임조사역 김윤후	연락처	02-3145-7165
요청대상 행위	<div><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예외적인 경제적 상황에서,</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가피한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li><li>○ 일시적 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li></ul></div> <div><input type="checkbox"/> 이에 금융권은 공동으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4.1.15. 각 금융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음</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1.9.1.~'24.1.31.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24.5.31.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24.3월 중 시행 예정) 이나,</li><li>○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활동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비조치 등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li></ul></div> <div><div><b>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주요 내용</b></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❶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24.5.31.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상호 간 공유를 제한</li><li>❷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li><li>❸ 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li><li>❹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함</li></ul></div></div>					

판단	<p>□ 금융감독원은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4.5.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li> <li>○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li> </ul>
판단이유	<p>□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p> <p>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li> <li>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li> </ol> <p>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 관 련 법 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제5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 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

## □ 「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절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 ②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⑥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⑧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⑩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채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채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 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채투자 평가"라 한다)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채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 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 마. 금융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보험업·금융투자업 위험관리체제 관련)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험업·금융투자업 위험관리체제 관련)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위험관리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

목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용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제12조(위험관리체제)**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2. 소득·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② 신용카드업자는 회원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2.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
3. 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디지털혁신국
연 락 처	02-2100-2625	02-3145-7165